

# 민정수석 부활... 민심 청취냐 사정기관 장악이나

### 5대 사정기관 총괄 '왕수석' 비판 윤 대통령이 직접 폐지한 조직 총선 이후 여론 파악 필요성 부각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직을 부활시켰다. 자신이 직접 폐지한 조직을 되살리는 것을 넘어 수석에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감 보다는 효능성을 중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서 사정 기관 장악을 포함한 역대 정권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직접 목격했다. 정치 입문 때부터 폐지를 추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의 발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직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과거 민정수석의 역할은 민심 청취보다는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지휘하는 데 부각됐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이 '왕수석'으로 불리며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휘두른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역대 민정수석의 면면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민정수석을 지낸 인물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민정수석 등 '실세 중의 실세'가 포진해 있다.

공교롭게 윤 대통령은 직전 두 정부의 민정수석과 악연이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불법사찰 수사를 지휘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지자 '살아있는 권력'을 정조준한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그러나 4·10 총선 패배 이후 기류가 바뀌었다. 대통령실이 국민 정서나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민정(民情)은 문자 그대로 '백성의 뜻·마음'을 살핀다는 의미다. 이를 담당하던 수석직을 폐지한 이후 날 것 그대로의 현장 민심을 수집·보고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기능이 약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민정수석직을 없앴다가 2년 뒤 부활한 사례를 언급하며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 스스로 민심 청취를 부활의 명분으로 내건 만큼 신설될 민정수석직은 과거와 달리 사정 기능보다 민심 청취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부활 이유를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신임 민정수석도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가급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개최 6말 7초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질 수도

### 황우여 비대위원장 밝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점이 기존에 거론되던 6월 말~7월 초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전당대회 개최 시점에 대해 "당헌 당규상 전당대회(개최)에 최소한도 필요한 시간이 한 40일 정도 된다. 6월 말에 하려면 5월 20일부터는(전당대회 준비 절차가) 착수돼야 한다"며 "그런데 원내대표 선출 자체가 늦어지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전당대회 룰에 대해 확정하는 문제라든지, 후보들에게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을 주면서 해야 될 것 아닌가"라며 "저는 가급적 신속히 하되 무리하지 말고 신중히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레도 한 달 이상은 늦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 위원장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대 시기가 8~9월로 늦어지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가 좀 더 자연스럽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는 질문에 "당무라는 게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일할 수는 없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황 위원장은 현재 '당원 투표 100%'인 전당대회를 유지하자는 의견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30% 이상 반영하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양론이 다 정치철학적 배경이 있다"며 "어디가 옳고 그르다기보다 후보군이나 우리 당의 전체 의견을 봐서,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옳을지 결정하면 될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룰을 논의하면서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득표 순대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각각 맡는 '집단지도체제'로 바꾸는 문제를 다룰지에 대해서는 "꼭 논의하자고 하면 하겠는데, 집단지도체제가 되면 대부분이 최고위원들 간에 이견이 표출되며(상황을) 수습하기가 어려워진다"며 부정적 전망을 내비쳤다.

황 위원장은 4·10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해 "우리는 여당이나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된 것은 사과와 용서를 구하며 우리가 잘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보이고, 4년간 여당이 무엇을 할지 대대적으로 국민 앞에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것보다 '586 청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쪽에 프레임을 짜져서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영남권 당선인들 표심과 친윤계 응집력에 달렸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유권자의 과반인 영남권 당선인들의 표심과 주류 친윤(친윤석열)계의 응집력이 향배를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경선에 나선 이종배(4선·충북 충주)·추경호(3선·대구 달성)·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은 각각 출신 지역이 다르고, 친윤 성향으로 분류되면서도 상대적으로 계파색은 엇다.

투표권을 가진 22대 총선 당선인 108명 중 영남권 인사는 지역구만 59명,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그보다 많다.

이들이 TK(대구·경북) 출신인 추 의원에 표를 몰아줄 경우 그는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한 비영남권 의원은 7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영남 출신은 지역적으로 통하는 게 있어 보인다"며 "동료 의원들이 뽑는 선거인 만큼 의원들 간의 친소관계도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총선 참패 직후 '도도 영남당'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 표 쏠림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당 원내수석부대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지낸 추 의원의 경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또 영남"이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친윤계의 표 응집력이 다시 나타날지도 변수다.

윤석열 정권의 주류를 형성한 친윤계는 지난해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경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총선 참패로 구심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출마설을 놓고도 친윤계의 의견이 엇갈렸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친윤계의 조직적인 지원이 특정 후보에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는다.

친윤계 주도 '국민공감'에서 활동했던 한 당선인은 "이철규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었지만, 이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수는 44명의 초선 당선인이다. 재선 이상 의원들의 경우 후보들과 친소 관계가 있고 4년간 의정활동을 공유한 반면, 초선 당선인들은 '백지상태'에서 투표에 나선다.

이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지역이나 계파보다 후보 개인의 비전과 역량에 대한 평가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초선인 김재섭 당선인은 통화에서 "친소 관계로 표를 던지기에는 세 사람 모두 잘 모른다"면서 "선입관 없이 정견 발표를 들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당선인도 "지역이 어떤 선거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영남이든 수도권이든 총정이든 마땅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이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尹,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직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이날 임명된 김주현(62)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친 검사 출신이다. 김 수석은 서울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

수원 18기로 박성재(17기) 법무부 장관보다는 한 기수 후배,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는 아홉 기수 선배다.

김 수석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989년부터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할 때까지 30년 가까이 검찰과 법무부에 몸담았다.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법무 행정과 특별 수사, 공보 업무를 폭넓게 경험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중흥그룹

더 특별하게 설계합니다  
더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클래스, 그 이상을 넘어

Beyond the CLASS  
중흥S-클래스